

YS 조문 정국에 여야 집안싸움 ‘숨고르기’

與, 공천특별기구 등 현안 충돌 일단 중단 野, 文 사퇴 촉구 결의안·安 입장발표 연기

김영삼(金泳三·YS)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주요 정치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갈등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우선, 애초 26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문에 오전으로 당겨졌다.

새누리당내 일촉즉발 분위기였던 공천을 갈등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냉각기를 거치게 됐다. 더욱이 공천물을 두고 양 대적점에 섰던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전 대통령 상동동계 두 적자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인 만큼 당분간 장례 절차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초부터 공천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친박계가 공천 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공천관리위를 띄워 여당만이라도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 속도를 내려는 김 대표 구상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일단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논의되면 또다시 위원장 인선부터 관란, 의제까지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사건건 대립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잠복기를 거치게 됐다.

한 고위 당직자는 23일 “조문 동안에는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정을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정치 사안에 대한 대화는 조문 정국 이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 현안인 ‘문·

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간 내분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시기도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되는 등 정치 시계가 늦춰지고 있다. 대립각을 세우는 각 주체들이 조문정국을

의식해 마찰음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꺼리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때문이다.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사퇴 촉구결의안’은 김 전 대통령

국가장이 끝난 26일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문·안·박 체제 성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조·재선 의원 10명도 당초 이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문정국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당 내분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개특위 회의장 간 놓여온 의원들

‘농어축지방주권지시기 의원 모임’의 새누리당 장운석(오른쪽부터), 새정치연합 김승남, 새정치연합 유성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이병석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특위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결렬됐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한다

세월호특조위 진통 끝 조사개시 결정...與 위원 퇴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 끝까지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전원위는 결의에 앞서 이 안건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한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인 류희인 의원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어땠고, 7시간여 동안 어떻게 상황을 보고받고 인식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라며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세세한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잠수 촬영 작업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특조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잠수사를 동원, 세월호 수중 선체를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신당파 의원들 내일 창당 토론회

박주선 의원·박준영 전 지사 등 참여 DJ센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사회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조경태, 유성열 의원 등이 내년 총선의 항배와 호남 정치권의 미래, 신당 창당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이 사회를 맡아 신당 핵심 인사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문일답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 참석자들이 즉석 질문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신당 추진 인사들은 신당 창당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조경태, 유성열 의원 등은 정치개혁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수성 전 총리와 박호근 전 과기부 장관 등 학계와 정계, 관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뜨거운 감자’ 광주 동·남구 지역구 조정

총선 유리한 현역들 ‘긍정적’... 지지기반 뺏기는 신인들 ‘반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광주 동구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동구(10만 114명)가 지난 8월말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13만9473명)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현재 광주 국회의원 8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접된 북구나 남구의 지역구와 합쳐져야 한다.

우선 동구가 북구(북갑 15만1892명, 북을 29만6102명)지역구와 합쳐져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상한선인 55만7890명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동구와 북구의 인구를 합산하면 54만

8108명으로 선거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동구와 남구(22만1228명) 지역구의 인구 합산은 32만1332명으로 지역구 분할 상한선 기준(27만8945명)을 넘게 되면서 동남갑과 동남을 두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동구와 남구를 합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두 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북구의 강기정, 동구의 박주선, 남구의 장병완 의원에게는 동남구의 지역구 분할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광주 국회

의원 의석이 유지된다면 지난 2006년 동구와 북구의 구간 경계조정 반대로 인한 의석수 감소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동남구 분할이 이뤄진다면 동구 박주선 의원과의 부담스러운 대결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주선 의원도 지역구 분할은 역풍과 강기정 의원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다. 또 남구 일부와 동구 전체가 합쳐지는 지역구를 택하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장병완 의원도 방림동 등 동구와 합쳐지는 지역구를 피하고 신흥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온전한 남구 지역구를 택한다면 훨씬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남구의 지역구 분할 배경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정치 신인들은 동남구 분할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 전 시장 진영에서는 지역구 분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높은 방림동 등 남구 구도심 지역의 동구 편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남구를 중심으로 기반을 다져왔던 정치 신인들도 동구와의 통합 및 분할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력 몰두하는 정치인들 물러나야”

千 “문·안·박, 계파 연합으로 당권 나누겠다는 발상”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23일 “사회개혁과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고 비전을 상실한 채 패거리 정치에만 몰두한 정치인 모두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정당 창당추진위 회의에서 “그럴 때에만 야권 혁신과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그 이후에 새로운 개혁적 인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야권의 주도세력을 세우는데 합당한 정당체제 개편과 개혁공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민심은 이미 수명을 다해가는 정당

을 완전히 떠났다”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제안에 대해서는 “친노 독점 하에서

문·안·박 3개 계파의 연합으로 당권을 나누겠다는 정도의 발상으로 총선 승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각각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야권 정치를 주도한 정치인들은 패권주의에만 유능했다”며 “국민은 기득권 청산 없는 짜깁기 연대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